

“경제 최대 위협은 야당 리스크”

이인영 “계엄령, 역사적 단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찬성... 오직 한국당만 반대 인사청문회 혁신... 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 제, 국방부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의지도 다지는 한편, 민생·경제 압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제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하자 민주당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 반면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시인단체가 원본을 공개하면서 재접화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국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감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조국이나 구속하라” 등 이유가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한국당의 한결같은 의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처리가 28.5%로 저조하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 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를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발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지역 및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더불어 살기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한국당에 촉구했다.

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삼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다시 국회의 시금이다. 우리 경제의 활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며 확장성 재정정책 기조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본격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설치 안전에 대한 보고를 했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설치가 결정됐다. 해당 사안은 최고위의 의결 사안은 아니고 보고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당은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해 본격적인 후보 선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스

민주당 전북청년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청년 정책의 부재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

전북지역 청년 정책 발굴과 타 지역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전북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는 46만여 명으로 전북의 인구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부재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도당 청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구인 ‘전라북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계청 집계 자료에서 전북을 떠나고 있는 청년층 인구는 지난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 2922명으로 해마다 증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부재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도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은 “청년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로 받는 혜택이 적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두세훈 청년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청년 정책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청년 대상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내에 지역거점 청년공간 구축을 유도해 도내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새로운 천년 위한 대도약의 발판 마련

도·총선공약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전북도가 새로운 천년을 대비, 대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연일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과 더불어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성장발전을 견인할 ‘총선공약 사업 발굴’ 증진보고회를 송하진 도지사의 주재 하에 28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도·실·국·전북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분과의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구성,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및 실무팀 협의를 거쳐 총 25건

의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복지 분야의 총 2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3조 111억원이다.

21대 총선공약 발굴을 위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 4월 TFT를 꾸려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등 총 6개 분과를 운영해 왔으며, ‘정책추진 당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을 기준으로 TFT 내부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국검토회의 등을 거듭해 도 대표사업 18개, 시·군 대표사업 22개 등 총 40건의

대표공약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이 비롯해 연구원,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대도약 전복을 책임질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더 나은 총선 공약을 발굴해 연내 각 정당과 공유할 예정이며, 발굴된 국책사업의 경우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성기자

신영대 위원장, 총선준비 시동 “행복한 군산 만들 것”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군산 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한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김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전북도와 군산시 시도 의원, 지역 단체 및 기관들과 지지하는 지역주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그동안 신영대 위원장과 정치적 활동을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혜철, 설훈, 맹성규, 박광은 의원과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송성한 전북도의회 의장이 군산을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전혜철 의원은 “신 위원장은故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운영을 함께 했던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소중한 동반자”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산은

새롭게 사람 사는 군산으로 만들어 갈 책임자 신영대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어진 황량한 도시 군산을 다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곳,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며 “답답한 나라 새로운 군산을 만들기 위해 참석해 주시고 멀리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